

## “도움 주신 분들에 보답 위해 진짜 한국인 되어 잘 살게요”

### 담양 이주여성 레니카씨의 크리스마스

(한국 이름 주수빈)

“낯선 한국 땅에서 남편까지 잃은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필리핀 출신 레니카 지반카야(여·32·담양군 대덕면 상운마을) 씨에게 올 해는 특별한 해이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맞은 지금 레니카씨에게 올 해는 깊은 좌절을 딛고 희망의 싹을 피운 한해였다.

지난 2000년 남편 주모(사망 당시 35세)씨와 결혼한 레니카씨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지난해 10월. 소

레니카씨는 지난달 법원에 ‘주수빈’이라는 한국인 이름으로 개명을 신청했다. 남편의 성씨와 큰딸 수운(8) 양과 작은딸 애빈(6) 양의 이름에서 한자씩을 따 지은 이름이다. 한국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도 곧 나온다.

레니카씨 가족의 새 보금자리에 는 수운양이 학교 독서대회에서 받은 상장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100점 맞은 국어·수학 시험지가 눈에 띄었다. 수운양은 “장래 희

### 소값 폭락에 남편 자살 ‘빚더미’ 車 용품공장 일하며 새 삶 찾아 “공부 잘하는 딸 보면 살 맛나요”

값 하락으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이 자살해버린 것이다. 남편이 남긴 것은 은행빚 7천만원과 정성스레 키르던 소 21마리 뿐이었다. 단칸 셋집에서도 쫓겨났다. 나라에 빠진 그녀에게 희망을 안겨준 것은 바로 이웃들이었다.

큰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돼지저금통을 털었고, 담양 출신 독지가는 “집을 마련하라”며 1천 500만원이란 거금을 보냈다. 이 틈을 후원자들이 담양군에 예산을 투입해 레니카씨 가족의 새 집이 지난 7월 완성됐다. 광주지역 봉사단체 ‘광주사랑회’와 대덕면사무소는 집안의 짐가들을 마련해주었다. 후원금과 남편이 남긴 소를 팔아 빚도 모두 갚았다. 레니카씨는 “남을 돕기 좋아하는 한국인의 기부문화가 없었다면 모든 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망은 선생님이”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레니카씨는 “한국말이 서툰 내가 아이들 공부할 도울 수 없어 걱정을 많이했었다. 공부 잘하는 큰딸이 기특하다”며 “작은딸 애빈이도 고모가 보내온 위인전 등 책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며 딸 자랑을 멈추지 않았다.

레니카씨는 현재 담양군 대덕면의 한 자동차용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근 물류공장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할 준비도 하고 있다. 진짜 한국인으로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중이다. 레니카씨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 이 모든 게 꿈만 같다”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레니카씨는 “남을 돕기 좋아하는 한국인의 기부문화가 없었다면 모든 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우리 다시 뛰어요” 큰 딸이 다니는 담양군 대덕면 만덕초교를 찾은 레니카씨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실직자 재취업 지원 1조 투입

### 노동부 등 4개 부처 내년 업무보고

내년 한 해에만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또 법정부 차원에서 모두 12만5천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며, 비정규직법 개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관련기사 3·9면>

노동부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내년에 고용안정 목적으로만 총 5조4천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1조7천299억원을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5만2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훈련 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대줄 예정으로 했다.

또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여성,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5천여개를 내년 중에 신설키로 했다.

여기에 경기 악화로 실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저소득층 가정의 가정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최저생계비를 가장 6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실직 또는 퇴직 후라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32만6609원)를 받을 수 있는 재산보유액 상한기준은 대도시는 69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61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여성부는 취업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을 내년 1월 중 지정해 운영, 여성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보훈체계를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체계로 이원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뚜렷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립들로 엄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모든 나라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의 예측과는 달리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악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 U대회 유치 활동 가속도

### 내일 유치위 창립총회, 위원장 선출·유치 전략 마련

광주시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이하 U대회) 광주 유치를 주도할 유치위원회를 창립, 유치활동에 가속도를 낸다.

시에 따르면 (재)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가 26일 오후 4시 감동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유치위원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으

로, 정·관·체육·경제·종교·학계 등을 망라한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 국제대회 전문가 17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재)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가 26일 오후 4시 감동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유치위원회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관·체육·경제·종교·학계 등을 망라한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 국제대회 전문가 17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벤트 유치위원회는 2013 U대회 유치과제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유위원의 비중에 중양인사보다 3배 정도 늘고 U대회의 주역인 대학생이 대거 참여하는 ‘시민 통합형’으로 구성된다.

유치위는 대회 유치 활동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

계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범시민 차원의 유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특별별 전담유치위원회를 구성해 U대회 개최지 결정 투표권을 가진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27명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전개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국 정부와 협조체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삼삼과 가야동자, 금호아시아나 등 광주지역 글로벌 기업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대학스포츠관계자와 FISU 집행위원장 휴먼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3년 대회 유치과제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만큼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철저히 살리 중심의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2015 U대회 개최지 신청 마감은 내년 3월14일이며, 4월 중순 후보 도시 현지 실사를 거쳐 5월23일 FISU 집행위에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윤영기자 zenfoot@kwangju.co.kr

## 광주·전남 보통교부세 4조853억원 내년 살림 숨통 트일 듯

광주·전남지역의 2009년 정부 지원 보통교부세가 늘어 내년 살림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국 시도별 평균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09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보통교부세 전체 규모는 4조853억원으로 광주 4천275억원, 전남 3조658억578억원이다.

광주는 지난해 3천571억원에 비해 19.7%(704억원)가 늘어났으며, 전남은 작년의 3조5천367억원에 비해 3.4%(1천21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광주는 광역시 교부세 평균 증가율 31.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전남도 역시 광역시 교부세 평균 증가율 3.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시 분청에 4천275억원이 전액 교부되며, 전남은 도 분청에 7천775억원, 시·군에 2조7천592억원이 배분된다.

전남지역 기초지자체 중에는 순천시 시가 가장 많은 2천371억원이며 여수시 1천772억원, 고흥군 1천749억원, 해남군 1천727억원, 신안군 1천386

억원 등이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신설, 확대한 자체 노력 반영기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액은 지자체별 또는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무분별한 축적·국의 여비 등 낭비성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건전재정운영’ 항목에서 광주시는 -31억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전남도도 -1억4천100만원의 페널티를, 목포시(-36억원), 신안군(-32억원), 해남군(-22억원) 등 14개 시·군이 페널티를 받은 반면 화순군은 2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조치 촉소를 유도한 ‘지방조직운영’ 항목에서는 곡성·화순군이 각각 28억원, 1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에서는 화순군이 6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생활폐기물 절감’ 항목에서는 여수시가 5억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내년도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제외) 규모를 작년보다 5.8% 증가한 27조2천791억원으로 확정했다.

/채희중·윤영기자 chae@

매월 2일은 치아검진의 날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원회 창립총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 “무인도 염소를 잡아라” 전남 7개 섬 생태계 보호 작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인도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남도 내 7개 섬을 포함, 다도해와 한려·태안 일대의 전국 52개 섬을 대상으로 염소 등 방목 가축 제거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완도군 기도와 목섬, 갈마도, 불근도, 독생도, 치도, 갈도 등이 대상이다.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염소는 식물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와 뿌리까지 통째로 먹어 치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표적인 가축이라는 것. 주민들이 섬에 방목한 염소는 천적이 없고 생후 8개월 후부터 1년에 두번 출산이 가능할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나 이들 52개 섬에 만 무려 1천60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우선 생태계 훼손 위험

이 큰 소규모 무인도부터 시작해 1 개의 섬에서 방목 가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공단은 작업에 앞서 가축 소유자에게 자진해서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자진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생포를 시도하고 생포가 힘든 지형에서는 소유자와의 협의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공주 공단 생태복원팀장은 “섬 생태계는 일반 산림지역과는 달리 한 번 파괴되면 회복이 어려워 환경조건을 갖고 있어 방목 가축 제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도해 상록활엽수림 복원과 연계해 섬 고유의 생태복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